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이 기 동(통일정책연구소)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신사고'와 '선군정치'
- III.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 I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 이 말은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공동사설은 국가경제력 확보의 선차적 과제로서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착실한 진행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중시 풍조를 세우고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국가경제력 확보의 목적지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달성으로 귀결짓고 있다. 이것만 보면, 북한은 앞으로 경제의 현대화에 몰두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²⁾

1)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2) 실제로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때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를 ‘북한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그러면서 공동시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선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다른 것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공동시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선차적 과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사고’라는 표현은 바로 이 대목에서 비롯된 것이다.³⁾ 여기에서 ‘신사고’라는 언어적 수사가 구 소련에서 제창된 ‘신사고’와 개념상의 혼돈을 일으키면서 그 진의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년 공동시설에서 북한은 ‘혁신’과 같은 전례 없이 낯선 어휘와 문구들을 토해 내면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억측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이 신사고라는 어휘로 대체되고,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러주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북한의 공동시설에 버젓이 쓰여진 상황에서 그러한 억측들이 나도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년초부터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방지역을 순회하였다.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설상가상으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신사고’가 마치 중국식 또는 구 소련식의 신사고로 별 무리없이 받아들이는 데 일조를 하였다.⁴⁾

한편,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소나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신사고를 개혁·개방의 징후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3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성사되었으며, 4차례의 장관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개최되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군사회담이 두차례 성사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에서의 진전 분위기와 때맞춰 나온 북한의 신사고는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스쳐지나가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5차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4차 적십자회담을

3)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건이나 매체를 통해 ‘신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4) 대표적으로는 서재진,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분석 및 내용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1.

무산시키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북한의 변화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북한의 대남 관계 개선의지가 한풀 꺾이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관계 개선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 북한의 신사고 제창은 그 논쟁의 중심에서 비껴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사고는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나 중국의 흑묘백묘론과 같은 개혁과 개방의 신호탄이라는 시기상조적 예단들에 대해 회의를 품은 신중한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언어적 수사에 동요됨없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때 적절한 대북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신사고라는 언어적 수사에 북한의 태도를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한가지 예를 들면, 페르손 일행의 북한 방문을 북한의 신사고 노선의 반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신사고를 제창하기 이전부터 많은 서방의 정치인들이 이미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사고'와 '선군정치'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것이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가설은 북한의 '신사고'는 북한의 새로운 통치이념이자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정형화된 '선군정치'를 전체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의 지도일군들과 주민들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방식을 쇄신하려는 매개수단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신사고'가 러시아나 중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개혁·개방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나머지 자칫 무리한 대북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신중한 대북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II. '신사고'와 '선군정치'

1. 신사고의 등장배경과 내용

북한의 노동신문 1월 9일자 정론은 신년공동사설에 제시된 신사고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구시대의 진부한 사고방식’, ‘낡고 뒤떨어진 것’, ‘지난 시기의 진부한 관습과 유물들’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⁵⁾ 이러한 표현방식은 마치 다른 공산주의국가들에서 새로이 등장한 정권이 기존 정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올 법한 표현들이다. 여기서 기존 정권이란 바로 김정일의 아버지인 김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김정일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감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시대가 어느 시점부터인지를 대충 밝힐 수 있다면, 신사고의 등장배경을 파악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신사고의 기본 핵심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구시대의 시작은 북한이 당면한 최대의 어려움인 경제난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3차 7개년계획이 시작된 1987년도부터가 구시대라는 오명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1993년도 최고인민회의에서 3차 7개년계획이 실패했음을 처음으로 자인했다는 사실은 그 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3차 7개년계획이 시작되던 시기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⁶⁾ 그리고 엄청난 외화를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된 시기도 이 시점이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책없는 경제난이 지속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고민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난은 사회 통제력의 이완을 수반하였고, 간부든 일반주민이든 우선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

5) 북한은 “구시대의 진부한 관습과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 나가자”,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는 21세기의 사람들이다”, “낡고 뒤떨어진 것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도,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진부한 관습과 유물들을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 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무엇을 하나해도 손색없이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 때이며 위력이다”라고 촉구한다. 정론,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6) 좋은벗들, 『북한사람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참조.

그러면서 북한의 동원메카니즘과 정치사상적 요새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이 1996년 당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간부들의 사업태도를 심하게 질책했던 사실에서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을만 하다.⁷⁾ 요컨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형성된 북한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의 비사회주의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들은 김정일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패배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1995년부터 농업생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생산이 턱없이 감소하자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식량구걸은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회주의냐'라는 식으로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유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정일은 새로운 분위기 쇄신책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셋째, 경제난과 식량난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은 주목받던 네명의 고위간부인 서관희 농업담당비서와 이봉원 총정치국 부국장, 그리고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최용해 사회주의로동자청년동맹(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의 몰락을 목격하였다.⁸⁾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과 식량난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

7)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1997), p. 309. 이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논쟁은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541.

8) 북한당국이 이들의 처형 또는 철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없이 說로만 회자되고 있지만, 이들이 몇 년째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들의 직위가 후임자로 대체되었다는 점, 만약 이들이 병으로 사망했을시 다른 고위관리의 경우 북한의 관례상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사망에 대한 공식발표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필자가 직접 확인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이 탈북전 북한대사관 근무시 현지를 방문한 고위관리들을 통해 들은 소식이 필자의 판단으로 볼 때,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서관희와 이봉원의 경우는 각자 농업의 실패와 군정치사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같은 시기에 공개 처형되었고, 김정우는 대외경제사업, 특히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가 부진한 책임을 물어 철직당하였고, 최용해의 경우는 업무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책임전가방식은 북한의 대다수 지도일군들에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북한판 복지부동을 양산하였다.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 지도일군들의 이러한 복지부동 자세는 김정일로 하여금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성공적으로 이겨왔다는 자평을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다소나마 북한의 식량난이 호전되었으며, 북한의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⁹⁾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기존의 강압적인 책임전가방식 보다는 주민들과 간부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쇄신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후대수령’의 위상을 가진 김정일이 경제난으로 인해 그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사고’를 제시했다는 시각이 있다.¹⁰⁾ 물론 수년간 계속되어온 경제난과 식량난이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 자신의 위상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면 타당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사고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사고를 개혁·개방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은 현재의 당면한 경제난 속에서는 굳이 신사고를 제창하지 않더라도 외화획득의 필요성은 여전히 절감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사고를 북한주민들의 개혁·개방에 대한 열망에 호응하기 위한 새

9)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다가 1999년 6.2%의 플러스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보고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도에도 1.3%의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 전현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과 신진엘리트,”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로운 바람몰이용 정책선회나 개혁·개방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존 정치·사상교육과의 충돌방지장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¹¹⁾ 이러한 시각에는 두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과연 주민들의 열망에 호응하는 정책을 추진할만큼 다원주의방식의 정책적 유연성 또는 관용을 갖고 있거나 혹은 사회세력으로부터의 절연(insulation from social forces)에 실패할 정도로 약한 국가(weak state)인가라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기존 정치·사상교육과의 급작스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개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의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형중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박형중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로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원적 문제성과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에 따른 과다 군비지출, 둘째, 개혁과 개방이 북한 내부에 현저한 동요요인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에서 개혁과 개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남측 관찰자들의 주장을 일면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²⁾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내생적 요인과 함께 세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³⁾ 첫째, 대내경제정책에 무리를 주는 고도 군비지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해당 국가가 개혁·개방의 경우에는 대내외 안보를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서방과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가지 전제조건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서방국가들과의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관계의 구축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

11) 서재진,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분석 및 내용분석』, pp. 3~4.

12) 박형중, “정상회담 전후 북한 체제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4호(2000), p. 190.

13) 위의 글, p. 192.

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접근은 심도있고 의미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고, 설사 서방국가들의 대북접근이 활발하게 추진되더라도 이들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은 결국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고질적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것이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때 가능할 것이며,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신사고를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선불리 연결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재미 친북학자인 한호석의 신사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호석은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연결짓는 것은 착각이라고 단정하면서, 신사고의 내용은 당 정치사업의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그러면서 로동신문 2001년 2월 3일자에 실린 김정일의 “나는 사업을 회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인용, 낡은 사업방법이란 회의를 하는 방법이므로 새로운 사업방법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한호석은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방법이란 “우리 당의 간부는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할 뿐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딸리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⁵⁾ 함축하면, ‘실력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력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며 “장군님의 의도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이 사업설계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일꾼들이 실력을 함양하기 위해 첫째,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정통하는 것, 둘째, 학습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하는 것, 셋째,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는 것 등이

14)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조국통일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p. 2.

15) 물론 북한은 이미 1997년 9월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서 “경제일꾼들이 실력과 수준이 높고 책임성이 강해야 대중의 지지와 신망을 얻을 수 있으며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력’을 강조한 바 있다. 『로동신문』, 2000년 1월 22일.

라고 지적한다.¹⁶⁾ 이러한 주장은 한호석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한호석은 특정문제에 대한 성실한 연구→현지에서의 해결방도 제시→재검토→구체적 과업과 수행방도 제시라는 김정일의 사업방법을 찬양하고, 정평군의 금강댐과 발전소 건설에 앞장선 군당책임비서 오기석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정일의 사업방식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⁷⁾ 결과적으로 한호석이 말하는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 즉, 신사고란 정치사업 방식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지도일군들이 과학적인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김정일의 사업방식을 따라 배우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호석의 견해는 필자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하면, 신사고란 김정일이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의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지 결코 개혁·개방을 위한 사전작업이나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신사고'와 '선군정치'의 연관성

'신사고'와 '선군정치' 노선 간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사업방식, 즉 당의 사업방식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군대이고, 군대의 모범을 주민들과 당정의 일군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일정권이 직면해 온 체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찾고자 선군정치가 등장했다는 배경에 대해서 대다수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¹⁸⁾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6) 『연합뉴스』, 1997년 9월 15일. 전현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과 신진엘리트,” p. 9에서 재인용.

17)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조국통일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p. 3.

18) 이수석,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조사연구』, 제4권 1·2호 합본(2000), p. 224.

10월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선군후로’라는 용어로부터 시작되었다.¹⁹⁾ 그 이후 선군혁명사상·선군혁명영도(1998.4.25 군창건 66주년 로동신문 논설), 선군정치(1998.10.21 중앙방송 논설), 선군후로의 정치방식(1999.2.5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성 발표회)이라는 용어가 차례로 등장하였다.²⁰⁾ 물론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정권의 확립 이후 줄곧 군을 중시하는 풍조를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²¹⁾ 그럼에도 선군정치를 새로운 정치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이 과거와 달리 군 인사의 서열,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현지지도에 있어서 다른 부문보다 월등한 우세를 보였다는 숫적인 측면²²⁾과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4.25)을 국가명절로 제정하고,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이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을 공식적으로 승계한 시점(1997.10)과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에 오르면서 새로운 정치방식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군대가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김정일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19) 북한에서 군증시사상은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건 1998년 4월 인민군 창건기념일에 나온 ‘선군혁명영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광송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2000), p. 130.

20) 『연합뉴스』, 1998년 10월 21일. 선군후로,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라는 세가지 용어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의미는 별 차이가 없지만, 용어상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군후로는 노동계급을 앞세우는 혁명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지만, 군대는 노동계급의 군대이기 때문에 선군은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선군혁명노선은 인민군대가 앞장을 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떠밀고 나간다는 전략노선으로서 군의 적극적인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당에 의한 군의 우대를 강조하는 소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1) 김정일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사회주의 정치사 전반이 곧 선군 영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방송』, 2000년 6월 8일.

22) 김정일은 과거는 물론 금년 5월만해도 총 18차례의 현지도도 횡수 중 14회를 군부대 방문에 치중하였다. 『연합뉴스』, 2001년 5월 26일.

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새로운 통치노선으로 정형화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내적 차원으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원인이 노동계급의 중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총대중시 선군혁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국가 또는 체제보위적 측면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체제가 제국주의세력의 붕괴책동에 직면하여 통일과 단결의 중심을 군대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³⁾ 둘째는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볼모로 잡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외협상의 중요한 바게인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대외협상력 강화 수단의 측면이다.²⁴⁾ 셋째는 혁명과 건설의 과정, 특히 경제회생 과정에서 오로지 믿을만한 조직은 군대밖에 없다는 경제건설 과정에서 군의 기여도 측면이다.

이상의 세가지 이유 중에서 신사고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군대가 나서면 무엇이든지 완수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경제회생의 과정에서도 군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군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인민군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 수 있다"²⁶⁾라는 김정일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오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

23) 이수석,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p. 230.

24) 북한은 선군정치를 제국주의와 정치외교적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보장하는 힘있는 정치라고 주장하고, 일례로 지난 94년 10월의 북·미 기본합의문을 선군정치에서 김정일 총비서의 외교적 성과로 꼽았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25) 인민군대의 사업방식에 대한 김정일의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의 예는 와산동-룡성간 도로확장공사시 청년일군들이 난관에 부딪치자 인민군대를 찾아 군사과업수행정형을 료해하고 군인들을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난관을 헤쳤다라는 내용이다. 『로동신문』, 2001년 5월 15일.

26) 『조선중앙방송』, 2000년 1월 24일.

는 인민군대에서 먼저 창조되고 있다. 우리가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자면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밀고나가야 한다”²⁷⁾고 주장한다. 이 말은 곧 인민군대가 가장 선진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바, 이것을 사회적 기풍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으로서의 신사고가 이미 군대내에서는 구현되고 있으며, 선군정치를 통해 이러한 신사고를 전체 사회에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신사고란 곧 선군정치의 강화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민군대의 어떤 점들이 김정일이 제시한 신사고와 맞아 떨어지는 가리는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북한 전체사회에 ‘인민군대 따라배우기’ 운동을 보급함으로써 주민들과 당정지도일군들의 사업방식과 사고방식을 혁신하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동신문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뛰여 들어 무조건 해내는 결사관철의 정신,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판을 크게 벌리는 대담성, 무슨 일이나 모가 나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해나가는 간진 일본새, 이것이 우리가 인민군군인들에게서 본 받아야 할 중요한 투쟁기풍이다.”²⁹⁾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주도성, 창발성, 헌신성을 지니고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유능한 작전가, 패기있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간단히 정리하면, 결사관철의 정신, 대담성, 질적수준이 높은 사업태도 이상 3가지가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이 인민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민들과 당정의 지도일군들은 이러한 사업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선 신사고의 등장배경에서 지적했듯이 북한 주민들과

27) 『로동신문』, 2001년 1월 4일, 1월 9일.

28) 북한이 전체 사회에 군사적 기풍을 세우려는 또다른 이유는 군대가 갖고 있는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성향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것이다.

29) 각주 27) 참조.

30)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당정의 지도일군들의 복지부동하는 태도를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통해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인민군대의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따라 배우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신사고와 선군정치의 연관성을 설명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기초인 국가경제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인민군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은 "국가경제력은 사회주의 강성부흥의 기초이다. 불패의 군력(군사강국)과 정치사상적 위력(사상강국)은 반드시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 안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고 주장함으로써 국가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과업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건설에서 있어서 인민군대의 역할은 선군정치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유난히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용어로 경제일군들에게 고무되었다.

선군정치의 외연으로서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함께 경제일군들에게 많이 강조되는 구호(용어)는 '강계정신'이다.³²⁾ 강계정신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강행군이 시작되던 1998년 1월 김정일이 강계지역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를 실시한 이후 2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강계정신은 주체조선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 정신을 끊임 없이 심화시켜 나가자"고 주장하면서 강계정신에는 "죽음도 두려워않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이 맥박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³⁾ 북한의 이러한 강계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어 창조된 정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강계정신도 결국은 선군정치의 성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⁴⁾

31) 위의 신문.

32) 로동신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1년 1월 4일.

33) 『로동신문』, 2000년 4월 22일.

34) 위의 신문.

북한에서 인민군대의 경제건설 참여는 인위적이라기 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견고한 명령체계와 동원체계를 갖춘 조직은 인민군대 밖에 없었다. 북한의 방송매체들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 또는 '대북적대시정책'이라는 문구들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역량을 경제활동과 사회통제활동에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기존의 당-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면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³⁵⁾

실제로 북한의 군대는 과거부터 해오던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에 일상적으로 투입되고, 버섯채취를 비롯한 외화벌이사업에도 군이 적극 나서왔다.³⁶⁾ 최근에는 기업소-공장이나 협동농장에 군인들이 투입되어 모범적인 일을 선보이면서 군 간부들이 이들의 경영을 맡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³⁷⁾ 또한 인민군대는 최근 북한이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강원도의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평북 태천 5호발전소와 태천언제(댐), 자강도의 송원언제, 량강도 대흥단군 종합농장과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 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군인들이 담당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북한이 경제회생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대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와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고'가 선군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분은 과학기술 중시노선이다. 노동신문은 "창조와 혁신은 높은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실력이 없으면 시대의 락오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35) 물론 중국의 경우도 1950년대 군대가 경제활동에 대규모로 참여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당시 중국이 느끼던 안보위협과 지금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6) 김병조, "김정일 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통일원(1997), p. 91.

37) 이수석,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p. 238.

주장한다.³⁸⁾ 그러면서 실력배양의 필요성과 방법으로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학습을 꾸준히 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에 완전히 정통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⁹⁾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기술중시노선이 왜 선군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가? 그 해답은 바로 북한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부문이 바로 군사분야이고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모범적인 집단이 군대이기 때문이다.⁴⁰⁾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서방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서방국가들과의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여타 다른 부문에서 인민군대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군사부문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강대국과 자신있게 맞설 수 있다는 국가자존의 차원이다. 둘째는 군대가 과학분야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룬 것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으므로 다른 부문도 군대처럼 과학적 사고를 견지해야 모든 사업에서 최고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핵문제를 통해 외국의 지원을 획득하였듯이, 북한처럼 내부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는 최근의 ‘자력갱생’의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로동신문은 『자력갱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기사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대외관계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고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의 현대적인 과학

38)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39) 위의 신문.

40)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조국통일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p. 4.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해야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⁴¹⁾라고 자력갱생의 개념을 확대해 놓고 있다.

III.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1. 북한 변화논쟁의 몇가지 오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변화 논쟁은 세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느냐 불변하고 있느냐? 변화하고 있다면 본질적이나 비본질적이나?와 같은 이분법적 시각에서 오는 오류이다.⁴²⁾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변화의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시하는 데서 생겨난 잘못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관찰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만을 놓고 변화를 운운하는 것은 참다운 사회과학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진보적인 것만을 변화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관찰자가 일정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예를들면, 다원주의와 시장경제)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만을 변화로 보는 일방적 규정에서 오는 오류이다. 변화란 퇴보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의 회귀도 변화이고, 그것을 퇴보적 변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보적 변화와 퇴보적 변화를 구

41) 『로동신문』, 2001년 2월 28일.

42) 김영수, “남북협력시대의 대북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국가안보정책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00. 10. 16. 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사실상 남조선 해방을 다짐한 노동당 규약을 고치려하고 있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남쪽과의 화해협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중국식 개혁모델이나 베트남식 개혁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 반면, 불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이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경제사정으로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장명순, “북한변화론 및 불변론에 관한 소고,” 『국방정책연구』, 2000년 겨울, p. 168.

분해야 하는 이유는 퇴보적 변화는 실질적 변화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사회구성원들의 사상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럴 때,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정책 자체를 수구적 의미로 보지 변화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변화의 수준을 북한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를 어미닭의 수준에서 관찰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아직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수준을 체제적 수준에 놓고 현재 북한의 변화가 본질적이나 아니냐라는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변화를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의 발전과정으로 보는 가운데 그 과정의 가장 저차원적 수준인 정책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⁴³⁾ 물론 본질적 변화의 내용은 당연히 체제적 수준의 변화, 다시 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수령유일체제에서 민주주의, 이념적으로는 주체사상의 포기 여부가 그 측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를 우선 거친 이후의 논란거리라는 것이다.

2. 향후 정책변화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북한이 제창한 신사고는 선군정치를 부각시켜 전체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지상목표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가

43) 북한붕괴론이 지배적일 당시의 시각은 북한의 변화는 고차원적 변화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북한체제가 안정화되어 가는 현시점에서는 저차원적인 변화에 착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차원적 변화의 선행가능성을 지적한 논문은 김성철 외,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1998).

지 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 첫째는 대내적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보급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이며, 그 방식과 내용에서 다소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뒷받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다. 셋째는 대내정책의 변화는 대외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과 같이 내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대외정책을 통해 그것을 보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식에서의 변화

북한은 향후 사상교양의 기본 방향을 김정일의 지도력 부각, 흐트러진 민심수습,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의 함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98년도부터 고난의 행군(96~97년)에서 승리하였음을 자평하고, 승리의 원동력을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력'에서 찾고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 하에서 '사회주의 강행군'(98~99년)과 '구보행군'(2000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모두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영도력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사고 등장 이후 김정일의 영도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김정일을 난관극복형의 지도자상에서 선견지명을 갖추고 실력있는 21세기형 지도자상으로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선견지명에 의해 과학기술중시노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현대화'와 '정보화'의 화신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은 신사고 제창 이후 이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난', '강행군'과 같은 난관극복의 이미지는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창조와 혁신'이라는 테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주민들의 개혁·개방 욕구를 대리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학

기술만 발전하면 자력으로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도한 군비투자에 대한 불만을 우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과학기술분야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군사비가 아닌 과학기술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정성옥 영웅' 만들기에 주력하였는 바, 앞으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영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에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사들의 비중을 늘리고, 신문독보회시 이 부분에 대한 독보와 토론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북한의 향후 사상교양은 흐트러진 민심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보다는 비사회주의적 개인우선주의에 몰들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당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차고 다니는 여성당원들이 "김일성은 죽어서도 여자의 가슴을 애무한다"는 식으로 비꼬는 투의 말들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또한 일반주민들이 버스나 같은 공개장소에서 노골적으로 당정의 간부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도 크게 제재당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한 대주민 사상교양의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물리적 방법을 통한 강압적 통제는 가급적 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법은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에 지친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김정일의 21세기형 지도자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모범따라배우기식 교양방식의 비중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모범인물 따라배우기와 모범사업 따라배우기가 있으며, 전자보다는 후자쪽의 방법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물따라배우기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대표적인 모범사업으로는 기존의 '대흥단정신', '강계정신'과 더불어 과학기술분야와 농업분야(특히, 토지정리사업)에서 새로운 모범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주체사상이나 붉은기사상 중심의 교양보다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같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을 택

할 것이다. 이미 주체사상 중심의 사상교양은 북한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부터 그 강조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⁴⁴⁾

마지막으로 북한은 ‘혁명적 군인정신’ 함양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모두 설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부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혁명적 군인정신이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군이 지원함으로써 현장속에서 자연스럽게 군의 모범을 따라배우게 하는 방식을 빈번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와 정보화 추진

북한은 국가경제력의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현대화’와 ‘정보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그리고 그 이유를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울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경제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식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전선으로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꼽으면서 동시에 농업생산증대와 1차소비품과 기초식품 생산과 같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현존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기초부문, 경공업부문, 그리고 농업부문이라는 3대부문을 중시하면서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44)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 251.

45)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함으로써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1년 5월 17일.

46)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그리고 북한은 정보화를 현대화보다 높은 단계로 규정하고, 현대화는 정보화와 결합될 때 그 물질기술적 토대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란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여기에서 생산의 정보화란 “모든 생산과정이 정보설비와 결합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위해 “전국적 범위의 전반적 경영활동을 위한 컴퓨터망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컴퓨터산업과 프로그램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안목과 혁신적인 사상관점’을 갖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⁴⁷⁾

이미 북한의 각급기업소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발전설비들에 대한 측정과 기술자료 수집과 같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다. 점차 정보화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북한은 남한과 서방세계의 선진과학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자본도입의 필요성도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북한이 선진국가들을 단번에 따라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다.

3) 대외평화분위기 조성 노력

북한은 이미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 유럽연합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북한이 이렇듯 적극적인 수교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은 미국일본과의 수교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왜 북한은 기존의 ‘강패’이미지에서 평화적 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47) 『로동신문』, 2001년 5월 17일.

48) 북한 최대규모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평양무래도전차공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위원발전소,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5월 23일.

가? 그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전술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대내적인 경제회생에 평화이미지가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안보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군사비 감축이나 군인력의 경제부문 투입이 현실적으로 모험이라는 판단을 할 것이다. 최소한 군사비는 감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실한 요구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한과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접어들면 북한의 대남대미관계는 낙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는 있었지만, 그 당시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지향점이 현재 단변도약의 시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외교정책의 최고목표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경제력 강화의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의미를 확대하면서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경쟁이 치열한 국제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기술이나 자본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북한은 여전히 불량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보·통신분야는 군사기술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에게로의 기술이전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불량', '깡패'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것이 선진과학기술이나 자본도입을 위한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평화적 이미지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외이미지 개선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진력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단기간내에 끝날 사안은 아니지만, 미사일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주고 받는 대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불량국가로서의 이미

지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대미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남한의 높은 과학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경제협력의 목표를 과학기술부문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개성공단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선진과학기술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할당(quota)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북한에서 신사고의 등장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신사고와 선군정치가 갖는 연관성을 분석한 다음, 그것이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하면서 주민들과 지도일군들 사이에서 비사회주의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출현하고, 패배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고위간부들에 대한 공개처형과 철직이 목격되면서 북한식 복지부동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이러한 사고와 행동방식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구체적으로는 국가경제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당의 정치방식을 과학적인 실력배양에 힘쓰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신사고를 제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곧 김정일의 사업방식을 따라배우는 것으로 귀착된다.

김정일은 자신의 사업방식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인민군대의 모범적 사업방식을 주민들과 당정의 지도일군들에게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군대가 결사판철의 정신, 대담성, 질적수준이 높은 사업태도를 이미 구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기초인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민군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하고, 인민군대가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의 강화를 통해 신사고를 전체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사고는 곧 선군정치의 강화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앞으로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에 입각한 혁명

적 군인정신을 전체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고, 국가경제력 강화 차원에서 대외정책에서 평화적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교양의 강화는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며, 혁명적 군인정신의 함양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번도약에 필요한 '현대화'와 '정보화'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방세계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사고'는 분명히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는 다르다. 북한의 신사고는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수단이다. 이러한 결론에 의거하면, 북한의 향후 변화 전망,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향에서의 진보적 변화 전망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